

충남리포트 제66호 2012. 04. 02

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

송두범 (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, dbsong@cdi.re.kr)

김종수 (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, jskim@cdi.re.kr)

목 차

< 요약 >

1. 왜 협동조합인가?
2.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관계
3. 충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
4.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
5. 협동조합을 통한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 방안

<요 약>

- 충청남도는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청 조직내에 “사회적경제TF팀”을, 충남발 전연구원에 “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”를 설치하여 충남도 사회적경제정책을 지원해 오고 있음.
- 그동안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 등 정부주도형 사회적경제정책이라는 제약된 정책의 틀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생태계를 구축해 왔으나, 금년 12월 1일 「협동조합기본법」이 시행되면, 사회적경제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의 틀도 커다란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됨
- 즉, 협동조합이 단순히 조합원의 이익증진 뿐만 아니라,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, 프랑스 공익협동조합, 캐나다 연대협동조합 등과 같이 지역사회의 전체이익과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진화해가고 있어 사회적경제의 핵심주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임
-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경제 블록을 형성한 대표적인 사례는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, 이탈리아 트렌토 협동조합연맹 및 볼로냐 사회적협동조합, 캐나다 퀘벡 연대협동조합, 우리나라 원주시의 협동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임
- 충남도는 2011년의 경험을 토대로 2012년에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음
 - 사회적경제추진조직 운영 : 충남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, 충남사회적경제TF팀,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
 - 사회적경제 제도 및 계획기반 구축 : 충남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 제정, 충남사회적경제5개년계획 수립
 - 사회적경제 연구기반 확충 : 사회적경제 내부거래 생태계 조성 연구, 충남지역협동조합활성화 방안연구
 - 사회적경제 인재·조직 발굴 및 육성 : 충남사회적경제아카데미 개설,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지원 및 권역 간 중간지원조직 육성
 - 사회적경제의 실현성 제고 :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 개최, 사회적경제 전략기획사업 발굴 및 지원, 사회적경제 전시판매전 개최,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 구축
- 향후 협동조합을 통해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추진,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,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지원제도 및 조직 정비, 지역사회단위 협동조합 전환가능단체 지원, 협동조합설립운동 전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1. 왜 협동조합인가?

■ 2012년은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로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권고

- UN이 2012년을 ‘세계협동조합의 해’로 정한 이유는 협동조합의 운영기준이 스스로의 가치와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 회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주목한 것으로,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·완화할 수 있는 것이 제4섹터로서의 협동조합임을 재인식했기 때문임(김기태, 2012;10).
- UN을 비롯하여 국제협동조합연맹(ICA), 국제노동기구(ILO) 등에서는 협동조합이 공동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요구를 실현하고자 모인 자율적이고 자발적 조직인 협동조합이 공동소유와 민주적 관리 기업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(황영모, 2012;4), 각국정부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권고해 왔음.

■ 우리나라는 개별협동조합법의 틀 속에서 협동조합설립에 제한을 받아왔으나, ‘협동조합기본법’ 시행(2012.12.1)으로 협동조합 활성화 기대

- 우리나라 역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독립된 개별협동조합 법률에 기반하여 운영해 왔음.
 - 농업협동조합법(1957년), 수산업협동조합법(1962), 중소기업협동조합법(1961), 신용협동조합법(1972년),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(2010년) 등 8개의 개별 법률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받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
-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UN의 권고,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등의 노력에 힘입어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되었고, 2012년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.

-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상법과 민법이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·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,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 뿐 아니라 2·3차 산업 전반에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,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하는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(기획재정부, 2012).

■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(*social economy*)의 주체로 충남도가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이상을 실현하는 핵심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

-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충청남도가 추진해오고 있는 사회적경제정책의 수행에도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. 이는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핵심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임.
-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의 주류를 형성하고,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접촉하면서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(*social cooperatives*),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(*general interest cooperatives*), 캐나다 퀘벡의 연대협동조합(*solidarity cooperatives*) 등과 지역사회의 전체 이익과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진화해가고 있음.
-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에도 ‘사회적협동조합’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협동조합이 단순히 조합원의 이익 공유 차원을 넘어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핵심조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- 따라서, 이 글은 새로 제정된 ‘협동조합 기본법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, 사회적경제 블록 형성을 위해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.

2.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관계

1)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?

■ 사회적경제는 개별국가 및 사회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규정되었음

- 미국은 시장, 제3섹터의 보완적 개념, 스칸디나비아는 국가의 보완적 개념, 프랑스·벨기에·스페인인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태로 사회적경제를 인식
- 반면, 사회적경제는 경제와 사회를 통합한 것으로 커뮤니티경제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지님.

〈표 1〉 국가별 사회적경제의 인식과 목적

구 분	사회적경제의 인식	사회적경제의 목적
미 국	시장 및 제3섹터의 보완개념	경제와 사회의 통합을 통한 커뮤니티 경제발전
스칸디나비아 국가	국가의 보완개념	
프랑스, 벨기에, 스페인	시민사회의 다양한 형태	

■ 사회적경제는 전통적 대두배경과 현대적 대두배경으로 구분 가능

- 사회적경제는 전통적으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으나, 현재는 불일치하는 수요제공,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, 새로운 시장과 영역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음.

〈표 2〉 사회적경제의 대두배경과 영역

구 분	19세기 초	1980년대 이전	2000년 이후
대 두 배 경	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주류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개선 위기에 대한 안전 보장 경제적 자립의 보장	시장실패의 실패 보완 정부실패의 실패 보완	사회역량의 제고 시민사회의 통합화 부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와 대안
영 역	실천영역	실천영역/학문영역	실천영역/학문영역

■ 사회적경제의 개념 규정

○ 유럽위원회(EU)

- 사회적경제란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,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(stakeholder economy)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, 상호공제조합, 민간단체, 재단이 이에 포함됨

○ 신명호

- 협동조합들 가운데 사회적목적, 자율성 및 민주적 의사결정, 이윤배분 제한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 등 일부 협동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동조합,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생산, 교환, 분배, 소비 등의 경제활동과 무관한 단체를 제외한 NGO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

〈표 3〉 경제활동 영역별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예

경제활동의 영역	사회적경제조직의 예	
생산	사회적기업, 자활공동체, 사회적일자리사업 조직, 노동자협동조합	로컬푸드 운동네트워크
소비	생활협동조합, 의료생협, 공동육아협동조합 등	
교환	지역화폐, 아나바다 운동단체 등	-
분배	자선모금단체, 마이크로크레딧기관	-

자료 : 신명호,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, 한국사회과학연구소, 동향과 전망 75, 2009.

■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와 특성

- 원칙 : 사회적목적, 사회적소유, 사회적자본 등의 원리로 작동
- 특징 : 복합목적, 복합이해당사자, 복합자원
- 목적 :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에 기초해서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충족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한 충족

[참고] 사회적경제조직의 주요특성

조 직	특 성
협동조합	자유 및 공개회원제 동등한 투표권·다수결 원칙 회원의 자본참여 및 자본의 가변성 활동분야 : 농업, 수공업, 금융, 소비/유통 등
공제조합	자유 및 공개회원제 동등한 투표권·다수결 원칙 보험요율에 의한 회원의 회비(보험료)로 운영 자본참여는 없음 자율과 독립 활동분야 : 의료, 생명, 손해보험 보증, 주택융자 등
협 회	자유 및 공개회원제 동등한 투표권·다수결 원칙 회원회비로 운영 자본참여는 없음 자율과 독립 서비스제공, 자원봉사, 여론개발/대안제시/정책제언(Advocacy) 활동분야 : 건강관리, 노인 간호, 보육, 사회서비스 등
재 단	수탁자의 재단운영 기부, 증여 등을 통한 자본 조달 활동분야 : 연구, 조사 및 지원, 국제적, 국가적, 지역적 프로젝트 수행, 구호활동, 건강관리, 노인 간호 등
사회적기업	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는 없음 사(私)기업의 기업가정신(이윤극대)과 결합한 사회적 목적 추구 사회 혹은 공동체 사업을 위한 잉여금 재투자 협동조합, 협회, 공제조합, 임의조직, 자선단체 등 그 회사형태가 다양하고 조직을 갖추지 않는 경우도 있음.

자료: 전형수, 사회적기업의 육성방안: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, 한국협동조합연구, 제27권 제2호, 한국협동조합학회, 2009, pp.5-6.

■ 사회적경제의 역할

- 사회적경제영역은 국가와 시장,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
 - 국가와 시장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 다는 사회적 목적을 지님

- 폭넓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그것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
- 호혜와 연대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전략

2)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

■ 협동조합 태동과 발전은 자본주의 경제발전 추세에서 야기된 두 가지 배경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 현상(안두순, 2010;236)

- 자본주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 제거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적 사회개혁 운동
- 소외되고 존립기반을 위협받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자신들의 존립기반을 촉진, 개선 및 확보를 위해 단결하는 움직임

■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(ICA) 100주년 기념 맨체스터 대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가 정립되었음

- 정의 :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(방법) 사업체를 통하여(수단) 공통의 경제·사회·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(목적)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(주체)임
- 가치 : 협동조합은 자조, 자기책임, 민주, 평등,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,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이 전통에 따라 정직, 공개, 사회적 책임,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함

■ 협동조합의 7대 원칙

-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
 -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결사체이며 성, 사회, 인종, 정치, 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음. 당사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면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음.

-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
 -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임.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등한 의결권과 동등한 투표권(1인1표)을 보유함
-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
 - 조합원이 자본조달에 있어서 공평한 부담을 맡고 자본에 대한 관리를 민주적으로 함. 자본금의 일부를 협동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함. 출자배당이 있을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. 잉여금 발생 시 조합발전, 조합원의 편의제공, 내부유보 및 기타 활동지원 목적으로 배분
- 자율과 독립
 -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, 자조적 조직으로서 조합원에 의한 자율, 정치적 자주,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면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.
- 교육, 훈련 및 정보제공
 - 협동조합이 조합원, 임원, 경영자, 직원들이 조합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. 또한 협동조합이 일반대중에 조합에 대한 정보를 홍보함.
- 협동조합간의 협동
 - 협동조합은 동종, 이종, 지역, 전국,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협동조합 간 협동을 실시함.
-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
 -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그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함.

■ 협동조합의 유형(정원각, 2009.2; 19-20)

- 소비자협동조합
 - 구매협동조합(먹을거리, 서비스 등), 주택협동조합, 의료협동조합, 교육협동조합, 공제조합

- 로치데일(Rochdale)과 같이 값비싸고 낮은 품질의 식품, 의류 등 생필품을 보다 값싸고 좋은 품질의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공동으로 구매
- 조합원의 실직, 집 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공제조합, 주택협동조합 등이 소비자협동조합 내에 또는 독립하여 만들어지기 시작
(1800년대 후반 스웨덴 교육협동조합, 1900년 초 일본의 의료협동조합, 최근 이탈리아 문화협동조합 활동)
- 생산자협동조합
 - 노동자협동조합, 농민(농업)협동조합, 중소기업협동조합
 - 프랑스에서 출발한 협동조합으로 생산자가 직접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
 - 농업협동조합 : 조합원이 농장 소유 시 농자재 및 농기구 공동구매, 공동이용 등을 위해 조합 결성
 - 중소기업협동조합 : 자금, 금융의 상호이용을 위해 조합 결성
 - 노동자협동조합 : 정보교류와 관리, 공동 작업을 위해 결성
- 신용협동조합
 - 독일에서 활발하게 시작된 조합으로 농자재 구입, 생산수단 소유나 공유를 위해 시작
 -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생산자나 중소기업인, 소비자, 생활인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결성
 - 우리나라는 부산에서 1960년 성가신용협동조합이 효시
- 새로운 협동조합
 - 이해관계자협동조합(멀티스테이커홀더:스웨덴), 산소(産消)협동조합(일본의 생산자, 소비자), 캐나다
 - 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유아시설을 운영하는데 교육제공자인 교사, 교육수혜자인 학부모, 복지책임자인 국가(지방자치단체)가 함께 출자하여 만들
 - 일본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조합 산소(産消)생협(에히메 유우끼생협), 캐나다에서는 생산자조합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협동조합(와일드 아일랜드식품협동조합)을 결성

3)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관계

- 사회적경제(*social economy*)는 협동조합운동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19세기 유럽의 결사체주의(*associationism*)와 밀접한 관련을 지님.
- 사회적 경제는 산업자본주의 초기 협동조합, 결사체 등 시민영역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자활조직을 배경으로 발생하였고, 협동조합은 경제적 지위가 유사한 단일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교섭력을 증대하기 위한 시장조직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음(최용주, 2009).
- 9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부활은 협동조합적 운영원리와 가치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님
 - 남부유럽 등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사례와 사회적기업들이 민주적 관리, 잉여의 내부유보, 자본참여 제한 등 협동조합적 운영원리를 실질적으로 지향
 - 사회적서비스의 생산과 유통, 공동체적 연대와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량 강화에 의한 사회적 후생 증대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새로운 정체성 부활
-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주체였던 많은 협동조합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접촉하면서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(*social cooperatives*),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(*general interest cooperatives*), 캐나다 퀘벡의 연대협동조합(*solidarity cooperatives*) 등과 지역사회의 전체 이익과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진화해가고 있음.
- 따라서, 사회적경제의 성공여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떻게 가시화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

[참고]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

조 직	특 성
Kimberly A. Zeuli (1998)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독점적 시장력에 대항한 시장개척(공동구매 및 공동판매) • 지역사회에 필요한 특정제품과 서비스 제공(신용, 돌봄, 보험, 교육, 육아, 주택 등) •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• 지역사회 통합(소통과 허브역할) • 인구증가(새로운 노동자, 가족) • 인적자원개발(농촌지역리더십개발을 위한 경험 및 훈련기회 제공) • 환경문제 유발 축소(지속가능한 환경 및 환경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)
정원각 (201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지역사회를 방어하는 현실적인 경제적 대안 제시와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•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•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구축 •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발전 • 지역순환경제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 활성화 • 조합원 교육을 통한 지역민주주의 확산과 정착

자료(*): ZEULI, KIMBERLY. 1998. Value-Added Processing: An Assessment of the Risks and Returns to Farmers and Communities, St. Paul, MN: University of Minnesota, (Unpublished PhD thesis)

4)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 블럭 형성

(1)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(MCC; Mondragon Collective Corporation)

- 1956년에 설립된 기업체에서 시작하여 2010년 현재 금융, 제조, 유통, 지식 등 4개 부문, 260여개 회사에서 83,859명의 고용자가 일하는 2010년 매출 2천 1백 4십억 유로, 총자산 3천 3백억 유로 규모의 스페인 7대기업
- 금융부문에서는 노동인민금고, 라군아로보험(의료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), 라로아군 생명보험, 제조부문은 파고르전자, 우르사건설사(구 겐하임미술과 시공), 유통부문은 에로스키, 지식부문은 기술연구소와 몬

드라곤 대학이 대표적임

○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의 원칙

- 소유참여에서의 노동, 노동자주권과 1인1표주의, 정보공유와 공개, 이익(잉여금)의 균등배분 및 누적, 임금노동자 고용제한, 연대임금, 자금과 기술의 자립, 연대(내·외부 상호협력), 경제·사회개혁의 원칙

○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의 성공요인

- 몬드라곤에는 제조업의 전통과 산업의 역사
- 미래에 대한 비전, 창의력과 끊임없는 추진력을 가진 로세마리아 아리스 멘이아리에따의 영감과 열정
- 최초의 협동조합을 설립한 기술, 동적이며 열정 있는 젊은이
- 알려지지 않은 협동조합멤버의 노력(개척자, 협력자, 블루칼라 노동자) 등

(2) 이탈리아 트렌토 협동조합 연맹

○ 이탈리아 토렌토(Trentina)는 인구 50만명이 거주하는 도농복합도시

- 인구 절반인 255,000명이 협동조합 조합원

○ 사회적경제인 토렌토협동조합연맹 구성

- 1890년 소비자협동조합 설립, 1985년 트렌토협동조합연맹 설립
- 536개의 조합(소비자협동조합 79개, 농업협동조합 92개, 서비스, 사회서비스 및 노동조합 298개, 신용조합 46개, 기타조합 21개로 구성)
- 연맹산하 종사자수는 16,000여명, 임원 5,066명, 연맹직원 174명임
- 연간 24억 유로(약 3조 6천억원)의 매출 기록
- 매출액의 3% 회비납부, 트렌토시의 재정자립도 100%
- 연맹차원의 행정, 법률, 세금, 설립,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단위조합의 발전유도

(3) 이탈리아 Legacoop 볼로냐

-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수도로 인구 130만명
 - 5,300여개 협동조합에 100만명의 조합원 보유
 - 300여개의 협동조합, 32억 유로(4조 8,000억) 매출
 - 전체 근로자의 10%인 3만 5천명이 고용
 - 지역 내 상위 50대 기업에 15개가 협동조합, 실업률 3.1%
 - 관리시스템 컨설팅, 행정-세무-신용서비스, 연구소, 일에 대한 서비스 등 제공

(4) 캐나다 퀘벡 연대협동조합

- 1997년 연대협동조합 설립
 - 지역발전, 시골마을 소멸, 근린서비스 폐업, 탁아서비스 발전, 노동통합, 고령자를 위한 홈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노력에서 출발
 - 2007년까지 479개 설립, 현재 300여개 활동
- 퀘벡의 협동조합 기업과 공제보험
 - 32,000개의 협동조합과 39개의 공제조직이 1997년 연대협동조합 설립
 - 850만 조합(개인과 기업), 87,000개의 일자리 60%이상이 도심외곽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들에 의해 제공
 - 설립5년차 영리기업 생존율은 36%, 협동조합의 생존율은 4%, 10년차는 영리기업 20%, 협동조합 46%
 - 심도있고 광범위한 네트워크 작동(연맹, 지역발전협동조합 등)

(5)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

- 원주지역 풀뿌리경제 운동의 전개과정
 - 1960년대 신탁운동과 교육운동, 한살림운동 등 협동조합지도자들의 지역

사회 활동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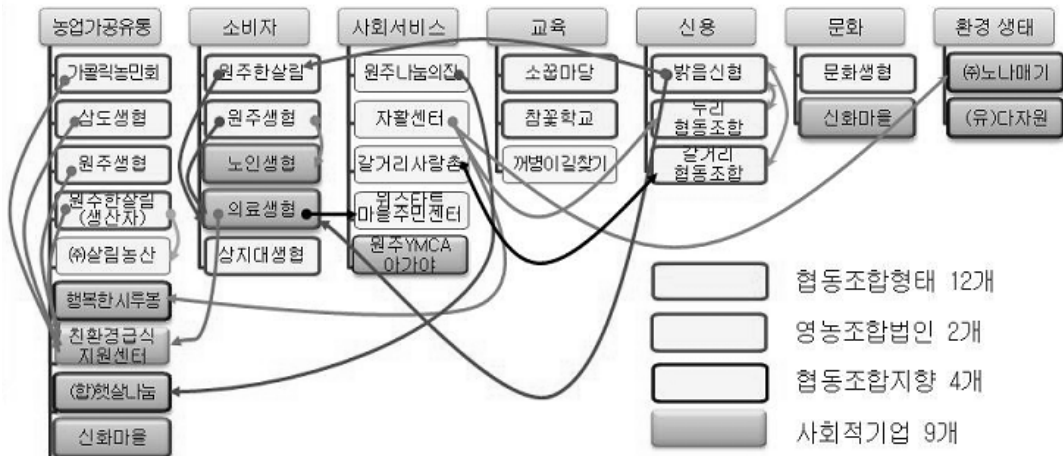
- 후속세대 육성으로 다양한 자발적 협동조합의 토양이 있었음.
- 2003년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창립(8개 단체)
- 2009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창립(15개 단체)
- 2011년 사회적경제조직협약문 합의(22개 단체)

○ 원주협동조합협의회의 주요활동

- 네트워크강화활동, 공동신문(원주에 사는 즐거움) 발간, 가을걷이 생명농업 대 축제, 국제교류활동, 지역의 미래 만들기, 사회적일자리/사회적기업만들기, 로컬푸드운동, 지역현안에 대한 연대활동

○ 원주네트워크의 의의와 가능성

- 협동조합운동의 정체성 유지 및 발전기반
- 협동조합활동가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제고
- 활동자간 연결망, 가치공유, 지역정체성 함양 계기
- 협동조합 간 협동,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집약되어 협동조합운동 재발견 계기
- 협동조합을 포함한 풀뿌리기업 생태계로서의 역할 정립 중



[그림 1] 원주시 사회적경제블럭화 사업 참여조직 및 관계망

3.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

1) 사회적경제 추진조직 운영

■ 「충남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」

- 충청도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핵심시책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, 제안,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해온 「충남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」을 「충남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」로 개편하여 운영

■ 충청남도청내 「충남사회적경제TF팀」

- 충청남도청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내에 「충남사회적경제TF팀」을 설치하여 충남사회적경제시책의 종합·통합적 추진기반 구축

■ 사회적경제중간지원기관인 「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」

- 충청도 사회적경제 정책을 핵심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연구 및 조사, 홍보, 교육 등 중간지원기능 수행
- 충청도 및 시군의 사회적경제 정책개발, 충청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 지원 등의 사업 추진

2) 사회적경제 제도 및 계획기반 구축

■ 「충남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」 제정

- 지역단위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 및 사회적경제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
- 기존 「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」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

■ 「충남사회적경제5개년계획」 수립

- 충남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시책이 분산 추진되고 있어 이를 종합화하여 체계화하기 위해 수립
- 충남 사회적경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 및 사업계획 중심의 내용

3) 사회적경제 연구기반 확충

■ 「사회적경제 내부거래 생태계 조성」 연구

-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자본 및 기술, 구매력 부족 등으로 시장경쟁력이 열악
- 사회적경제 조직 간 내부거래 활성화를 통해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사회적경제 블록형성에 기여

■ 「충남지역 협동조합 활성화방안」 연구

-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응하여 충남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충남지역 협동조합 현황을 분석하고,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및 구체적 실행을 위한 추진전략 도출

4) 사회적경제 인재·조직 발굴 및 육성

■ 「충남사회적경제아카데미」 개설

-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, 공무원 등의 역량을 제고하고, 사회적경제를 지역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역리더 발굴 및 양성 목적
-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수준 및 시군·권역 등 공간단위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

■ 「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지원 및 권역간 중간지원조직 육성」

- 충남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협력 및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해 업종별, 지역별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구축
- 충남도내 권역 및 시군별 중간지원 예비조직의 발굴 및 육성

5) 사회적경제의 실현성 제고

■ 「사회적경제활동가 대회」 개최

-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과 도민이 참여하여 충남의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산을 논의하는 연대와 소통의 장 마련
- 전국의 사회적경제조직(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, 협동조합, 자활공동체, 시니어클럽, 유관 지원조직 등), 민간단체, 실천가 등을 중심으로 시군과 공동추진 방안모색

■ 「사회적경제 전략기획사업」 발굴 및 지원

- 사회적경제의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연대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개발하는 실험적 시범사업

■ 「사회적경제 전시판매전」 개최

-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품 및 제공서비스에 대한 전시, 홍보, 판매를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도민 이미지 향상 및 대외경쟁력 제고
- 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향토축제와 공동개최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시너지효과 증진

■ 「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」 구축 및 운영

-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제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모색
- 기 구축된 충남도 농산물쇼핑몰인 「농사랑」 활용방안 우선적 검토

4.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

1)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 및 내용

■ 기본법의 의의 : 사회적경제의 법적 기반 제공

경제영역	하이브리드영역		사회영역
상법	협동조합기본법		민법
영리기업 규율	인적결사체 기업의 규율		비영리조직 규율
사익(私益)	공익(共益)	공익(公益)	공익(公益)
주식회사 등	일반협동조합	사회적협동조합	사단법인 등

■ ICA의 협동조합원칙을 법조문으로 최대한 반영

-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격 반영 : 투기행위 금지, 조합원 이용원칙(예외 인정 대통령령으로) 등
- 의무사업 항목 : 조합원 교육과 홍보, 협동조합 간 협동, 지역사회 기여
- 지속가능한 운영제도 : 출자배당 10% 이내, 이용액 배당 우선, 법정적립금 10% 이상 등

■ 협동조합 설립의 범위, 요건에서 대폭확대

-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협동조합 설립가능
- 노동자협동조합,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등 기존에 설립 불가능했던 협동조합 유형을 설립할 수 있음
- 5인 이상의 조합원이면 자본금 제약 없이 신고만으로 설립
-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특수법인격 부여

■ 사회적협동조합 제도 도입

- 조합원의 편익보다 사회적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,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,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
- 생산자·노동자·소비자·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
- 비영리법인으로 명시 : 정책적 지원, 세제혜택, 부과금 면제
-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가능 : 출자금 한도, 조합원 대상
- 공적인 사업이 40% 이상(고용통합, 사회서비스,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)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 가능
- 기획재정부장관이 인가, 감독(해당사업별 중앙부처 위임가능)
- 엄격한 운영조건 : 배당금지, 법정적립금 30%, 잔여재산의 사회 환원

■ 기획재정부를 협동조합 주무부처 지정

- 기획재정부장관이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,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,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

〈표 4〉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

구 분	협 동 조 합	사회적협동조합
법 인 격 설 립 사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인 ■ 시도지사 신고 ■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비영리법인 ■ 기획재정부(관계부처) 인가 ■ 공익사업 40% 이상 수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사회 재생, 주민 권익 증진 등 - 취약계층 사회서비스, 일자리 제공 - 국가·지자체 위탁사업 -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
법정적립금 배 당 청 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잉여금의 10/100 이상 ■ 배당 가능 ■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잉여금의 30/100 이상 ■ 배당 금지 ■ 비영리법인·국고 등 귀속

■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을 위한 근거 마련

-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른 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, 외국협동조합, 관련 국제기구 등과 상호협력,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

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명시

- 기존 8개 개별법¹⁾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

■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내용 포함

- 정부의 협동조합 육성 의무 명기
 - 3년마다 실태조사, 기본계획 수립(기획재정부 주무부처)
 - 매년 7월 첫째 토요일 ‘협동조합의 날’ 법정기념일 부여, 이전 1주일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
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
-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적용배제(불공정거래행위는 적용)
- 기본법의 협동조합법인격 전환 시 2년간 업력인정(부칙)

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전 준비작업

- 2012년 12월 1일 시행 : 철저한 행정준비 추진,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
- 일반협동조합의 등록 : 시도지사에게 위임
- 도 단위 협동조합 발전계획 수립
-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교육, 홍보, 설립 및 전환을 주도한 협동조합 지도자 육성 등

2)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활성화 예상분야(충청남도, 2012.2.22)

■ 1유형: 협동조합을 통해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 협력사업 확대로 경쟁력 강화

- 이탈리아 볼로냐의 수제구두 협동조합 : 가죽세공업자, 디자이너, 봉제업자, 수선업자 등이 제휴하여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(지역산업클러스터의 선진사례)

1) 농업협동조합법, 수산업협동조합법,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, 산림조합법, 중소기업협동조합법, 신용협동조합법, 새마을금고법,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

- 한국의 지방도시에서도 재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, 원재료 공동구매, 공동판매, 공동 택배배송 시스템, 주차장 공동이용 등 재래시장활성화의 소프트웨어 제공 가능성 높음
- 슈퍼마켓 협동조합 등의 협력사업 활성화 가능

■ 2유형 : 자활공동체, 돌봄사업 등의 자생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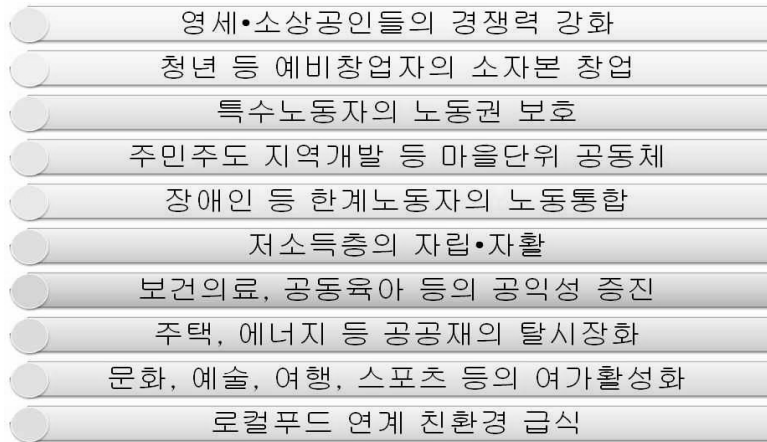
- 현재의 개인사업자 등록방식보다 원활하게 법인화 가능
- 업종별 연합회를 설립하여 경영자공유, 혁신사례의 신속한 전파 등으로 자생력 강화 가능

■ 3유형: 낙후지역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개발활성화

- 인구과소화, 고령화된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더 많은 사회근린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시장성이 낮아 영리기업들이 외면하고 있음
-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자신들의 근린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음
-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2008년 기준 인구 3,000명 내외의 작은 지역들에서 주민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병원 및 소규모 고령자 케어시설이나 주유소 등 328개소의 협동조합을 운영. 지역공동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고용문제에도 순기능

■ 4유형 : 지역의료협동조합적 공익적 협동조합의 활성화

- 비영리 의료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료 체계의 선진화, 지역주치의 제도를 통한 선제적 치료 및 과잉진료 방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문제 완화, 유사 의료생협 문제의 해결통로로 운영



[그림 2] 협동조합 활성화 10대 유망분야

5. 협동조합을 통한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 방안

1)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추진

-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조직이면서 기업임
- 협동조합을 통해 정부와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유럽, 캐나다 등의 사례는 지역사회 단위,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.
-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정부 재정지원 중심의 사회적경제 시책들이 확대되고 있으나,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정부의 “사회적기업 인증=인건비지원”이라는 단기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조 속에서 추진(이강익, 2012;90).
 -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자원동원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유지의 성과를 거두었으나, 고용유지, 운영 및 경험부족,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, 수익창출 곤란 등 자립성 취약과 정부의존성이 강한 문제점

-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제공이라는 협소한 의미에서 벗어나 자립적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에 대한 정책주체들 간의 합의가 요구됨
- 이를 위해서는 「협동조합기본법」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

2)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

- 협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,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지역사회 단위 사회교과서 등에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이 기술될 필요가 있음
- 일반도민들을 위해서는 지역대학, 민간단체 등에 협동조합아카데미를 설치하여 협동조합의 이해,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
-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 협동조합 과정을 설치하거나, 협동조합 특강 프로그램을 개설
- 도, 시군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협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동아리 등 연구소모임을 구성하여 학습(워크숍, 세미나 등)

3) 도, 시군 각 부서별 협동조합 사업영역 발굴 및 조사

- 도청 및 시군 각 부서별 협동조합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영역 발굴
 - 사회적 배제 및 소외된 분야, 농업농촌분야, 귀농귀촌분야, 보건의료 등
- 협동조합 설립 시 참여 가능한 단체현황 및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
 - 다문화단체, 로컬푸드단체, 영세상인단체, 청년조직, 문화예술단체, 장애인단체, 보건의료 단체, 공동육아단체 등

4) 사회적경제정책 추진 지원제도 및 조직 정비

-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센터 등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조

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조성

-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전담하는 사회적경제조직(협동조합 조직)을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도, 시·군청에 설치
예)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내에 “충남사회적경제TF팀” 설치
- 사회적경제를 전담하는 중간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협동조합의 지역 내 설립 및 운영을 지원
예)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(커뮤니티비즈비즈센터 등)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을 협동조합에 까지 확장하여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5) 지역사회단위 협동조합 전환가능단체 지원

- 지역사회 단위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한 단체를 발굴, 조사하여 협동조합으로 전환방법 등에 대한 지원
-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관련된 분야
 - 로컬푸드 참여농민, 마을공동체, 귀농귀촌자 모임, 생산자 단체, 축산물사육농가, 임산물채취농민 등
- 지역 내 서비스업과 관련된 분야
 - 전통시장 상인회, 전통시장 내 입주상인, 소규모 점포운영자, 지역 내 소규모 음식점 운영자 등
-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
 - 자활공동체, 다문화가정모임, 시니어클럽, 돌봄 및 육아보호자 모임, 지역 의료단체 등
- 문화, 교육 및 예술과 관련된 분야
 - 방과후학교 참여단체, 문화예술인 모임, 시민문화동호회, 생활체육단체 등
- 환경 및 재활용과 관련된 분야
 - 환경관련 교육단체, 환경단체, 재활용 단체 등

6) 협동조합 설립운동의 전개²⁾

■ 읍면동 단위 복지 및 소비자협동조합 설립운동 전개

- 농어촌은 육아, 교육, 고령농가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
- 1읍면동 1공동육아/올인원지역복지 협동조합 설립 운영
 - 1차년도 5개 시·군 설명회 등 시범사업 추진
 - 2013년까지 30개소 설립목표
 - 충남 지역 내 유아교육과, 사회복지과 학생 우선 취업 협의
- 1시군 1의료생협 설립 운영하되 농어촌 우선추진
 - 지역의료문제의 자립적 해결방안 강구, 사회적협동조합 추진
 - 충남 지역 내 의과대학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
-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법인격 부여시 사회적협동조합 검토

■ 농어업 및 농어촌 협동조합 활용전략

- 농어업생산유통은 “영농, 영어조합법인” 활용
 - 영농, 영어업법인이 협동조합 성격을 강화하도록 유도
 - 농식품부 정책개선 전까지는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상 유리함
- 농어촌지역복지분야와 꾸러미 등 직거래 분야는 기본법 유리
 - 다중이해관계가 협동조합, 동업자협동조합 가능
 - 도 단위 연합회/연합컨소시엄/공동브랜드로 수도권 선점효과 목표

송 두 범, dbsong@cdi.re.kr

충남발전재단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

Tel. 041-840-1200

김 종 수, jskim@cdi.re.kr

충남발전재단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

Tel. 041-840-1211

2) 이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이 충남도 연찬회에서 제안한 내용임(2012. 2. 22).

◆ 참 고 자 료 ◆

- 기획재정부,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및 후속과제, 보도자료, 2012.2.8
- 김기태,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배경과 그 주요내용, 지역리더, 통권 25호, 지역재단, 2012.
- 김기태, 협동조합 활성화는 도민이 행복해지는 길, 정책FOCUS, 충남발전연구원, 2012.
- 노대명,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: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, 시민사회와 NGO, 제5권 제2호, 2007.
- 박범용,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와 향후과제,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와 향후과제, 제19차 지역리더포럼, 지역재단, 2012.
- 신명호,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, 한국사회과학연구소, 동향과 전망 75, 2009.
- 안두순, 경제위기와 협동조합의 역할, 한국협동조합연구, 제28권 제2호, 2010.
- 이강익, 지역단위 협동과 연대의 경험과 교훈 : 협동조합의 지역화 전략, 지역재단 창립 8주년 기념 심포지엄, 지역재단, 2012.
- 전형수, 사회적기업의 육성방안: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, 한국협동조합연구, 제27권 제2호, 한국협동조합학회, 2009.
- 정원각, 협동조합운동의 개념과 의미·역사·현황 그리고 각국의 사례, YMCA간사학교, 2009.2.
- 최용주, 사회적경제의 도래와 협동조합운동 : 유럽과 캐나다의 논의동향을 중심으로, 추계학술대회, 한국협동조합학회, 2009.
- 충청남도, 협동조합기본법 공포에 따른 우리도 대응방안 연찬회 계획, 2012.2.22.
- 황영모,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준비와 실천, Issue Briefing, Vol.74, 전북발전연구원, 2012.
- Shin Irina, 한국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, 석사학위논문, 성균관대학교대학원, 2011,p.34.
- ZEULI, KIMBERLY. 1998. Value-Added Processing; An Assessment of the Risks and Returns to Farmers and Communities. St. Paul, MN: University of Minnesota. (Unpublished PhD thesis)

충남리포트 발간리스트

구분	제 목	집필자	발행일
2008-01	허베이 스피리트(Hebei Spirit)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	송두범	2008. 1.21
2008-02	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	강영주	2008. 2.22
2008-03	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	이충훈·권영현	2008. 3.19
2008-04	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	조봉운·송두범	2008. 5. 2
2008-05	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」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	송두범·강영주	2008. 5.27
2008-06	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	이관률	2008. 6.19
2008-07	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	신동호·강영주	2008. 7.30
2008-08	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	백운성	2008. 8.29
2008-09	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·군별 균형발전 평가	원종문·강영주	2008. 9.30
2008-10	「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」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	백운성	2008.10.30
2008-11	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	오용준	2008.11.28
2008-12	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	정옥식	2008.12.30
2009-01	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	강영주	2009. 1.30
2009-02	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	한상욱	2009. 2.24
2009-03	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	정종관	2009. 3.11
2009-04	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	전승수·한상욱	2009. 3.18
2009-05	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	오석민·한상욱	2009. 4.24
2009-06	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	이인배	2009. 5. 8
2009-07	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	임준홍	2009. 6.29
2009-08	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	이인배	2009. 7.23
2009-09	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	최인호	2009. 8. 6
2009-10	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	윤병선·유학열	2009. 9. 7
2009-11	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	임준홍·이상준외	2009. 9.30
2009-12	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	조한석·백운성	2009.10.30
2009-13	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	임형빈·유학열	2009.11. 9
2009-14	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!	김용웅	2009.11.18
2009-15	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	이재완·이관률	2009.12.11
2009-16	대전·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	류덕위·김양중	2009.12.31
2010-01	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	임준홍·조수희외	2010. 1.29
2010-02	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	김동준·김양중	2010. 2.24
2010-03	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-사회계정행렬(SAM)을 통한 분석	임재영	2010. 3.10
2010-04	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	이용재·임준홍	2010. 3.18

구분	제 목	집필자	발행일
2010-05	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	이충훈·권영현	2010. 4. 5
2010-06	아·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	최병학	2010. 4.30
2010-07	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	김양중	2010. 5.10
2010-08	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	송두범	2010. 5.27
2010-09	대전·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	김동준·김양중	2010. 6. 3
2010-10	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	장동호·윤정미	2010. 6.21
2010-11	충남 귀농·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	유학열	2010. 8. 9
2010-12	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	신동호	2010. 8.16
2010-13	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(1998년-2007년)	임재영	2010. 8.19
2010-14	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	이인희	2010.10. 6
2010-15	사람중심,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	조명래·임준홍외	2010.10.29
2010-16	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	임준홍·김양중외	2010.11.09
2010-17	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	임형빈	2010.11.16
2010-18	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	오용준	2010.12.30
2011-01	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·군의 대응방안	한상욱	2011.01.13
2011-02	2011년 충남의 GRDP 전망	김양중·이선희	2011.02.10
2011-03	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	이충훈	2011.03.31
2011-04	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	사공정희	2011.04.21
2011-05	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	임준홍 외3명	2011.05.02
2011-06	수질오염총량관리제!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	이상진·김영일	2011.06.23
2011-07	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	성태규외	2011.06.30
2011-08	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	임형빈	2011.07.11
2011-09	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	정옥식	2011.07.27
2011-10	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	성태규	2011.08.22
2011-11	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·협력 방안 연구	김양중	2011.10.31
2011-12	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	홍성효	2011.11.30
2011-13	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	이인희	2011.12.29
2012-01	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	김종수	2012.01.31
2012-02	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	신동호	2012.02.13
2012-03	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	김양중	2012.02.28
2012-04	2012년 충남 GRDP 전망	김양중	2012.02.28
2012-05	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	임형빈	2012.03.12

■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(www.cdi.re.kr)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,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!